

檢 전방위 수사에 청문회 위태...靑 '임명강행' 으로 돌파하나



고심 깊지만... '조국 고수' 기류 변함없어 檢 수사 항방 따라 '고수 원칙' 흔들릴수도

유한국당은 28일 검찰수사를 고리로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보이콧 운동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그러나 '조 후보자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조 후보자 수사를 '검찰·사법개혁 흔들기'로 보는 시각도 있어 향후 청와대는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향으로 현 상황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검찰이 전날(27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야당의 의혹제기 수준에서 검찰의 정식수사로 상황이 전환된 것이다. 더구나 통상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당사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풀렸다는 것을 뜻한다. 여론에서 강조해왔던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있어 위법은 없다'는 주장에 '블럼' 딱지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이 전방위 수사에 돌입한 데에 적잖이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27일)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사안으로 놀라다는 반응"이라고 당혹스러운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28일)도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조 후보자 거취에 대해 '그대로 간다'는 데에는 변화가 없다는 분위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검찰수사로 인해 청와대(의) 생각이 많아질지는 모르겠으나 그에 대해 청와대의 입장이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그렇다면 (청문절차 시한인) 9월2일을 넘기게 되는 것이라 여러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통한 조 후보자 임명강행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인사청문회법상, 시한 내 국회가 청문회결과보고서를 인사혁신처로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추후 국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결과보고서가 9월2일까지 재송부되지 않을시, 9월3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절차를 밟을 경우, 문 대통령은 추석연휴까지 가지 않도록 재송부 요청일을 최대 사흘로 정해 놓았다. 9월6일에는 조 후보

자를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에선 조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갖은 의혹제기로 적잖은 흠집이 난 만큼 검찰·사법개혁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끝까지 조 후보자를 철옹성으로 지키는 것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뜻에 맞게 검찰·사법개혁 구상을 실현시킬 사람이 조 후보자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란 해석이 많다. 그러나 검찰수사 항방에 따라 문 대통령의 '조국 고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검찰수사 중 조 후보자에 대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발견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 그가 해왔던 일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스1

“함께 간다지만”...조국 사태 바라보는 與 복잡한 속내

이해찬 대표 조국 압수수색 공개비판하며 당 긴급대책 마련 수도권 의원들 지역구 성난 민심 '난감'...“총선 영향 걱정”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적폐”라며 격노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며 공개비판했다. 여당의 '조국 지키기'는 각종 의혹제기에 대한 방어와 인사청문회 조율 난항 단계를 지나 검찰을 향한 '경고'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조국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민주당 내 분위기는 강경론과 회의론으로 어수선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해찬 대표의 강력한 '단일 대오' 입단속은 효과적이었다. 공개적

으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견을 내놓는 의원들은 거의 없다. 조 후보자를 고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당내 이견이 노출돼 당이 내용에 휩싸이는 것보다는, 조 후보자와 함께 '맞으며 가겠다'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지지세력 결집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아직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문에 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다만 지역구나 현장에서 매일같이 '민심'을 접하는 의원들은 내년 총선 영향을 걱정할 수 밖에 없다며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특히 20~30대 유권자의 목소리가

큰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더욱 민감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까지 갈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당 내부에 여전히 존재한다”며 “당내에선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났는데 장관이 된대에도 사법개혁을 밀고 갈 수 있느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내년 총선에서도 결코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내 시각차가 있는데, 조국을 끌어내야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 이대로 계속 가야 한다는 측에선 레임덕을 막아야 된다는 주장인데 현재 팽팽하게 양측이 반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에는 우려하는 사람이 극소수였는데 이제는 반반까지 늘어났고, 말은 못하지만 걱정하는 의원들이 꽤 많이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지낸 한 수도권 중진의원도 이날 통화에서 “지역구에선 조국을 지키려는 강한 주문도 있는 반면, 위선이고 특혜라는 비판적 시각도 많다”며 “여당 의원으로서 뭐라고 말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또 “조국 후보자 본인이 의혹제기에 대해 왜곡돼 있다고 하니, 청문회를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검찰 압수수색 역시 매우 이례적인데, 그렇다고 잘못한 것이라 할수도 없고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뉴스1



“조국 후보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촉구 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학규, 9월 4주까지 '유승민·안철수' 통합과 승리의 길 제시

유 전 대표와 연락 주고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9월 4주까지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와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과 승리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수봉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언 이행 TF' (테스크포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 대표의 선언 이행을 위한 3대 목표와 7대 전략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TF는 △당 통합과 개혁 실현 △제3의길 대통합개혁정당 추진 △총선준비체제 구축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당 통합과 개혁 실현'을 위해 원내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고 9월 4주까지 손학규-안철수-유승민의 '통합과 승리의 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의 가치를 10

대 정책과제로 구체화해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인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퇴진파 측에 따르면 손 대표는 유 전 대표와 연락을 주고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퇴진파와 당권파 간 이견차는 여전히 현상이다. 오히려 당 안팎에서는 손 대표 등 당권파의 일방적인 '통합' 주장이 양측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김윤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